



한반도 평화협정 이것만은 알자!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를 보장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안!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열쇠!

평화협정 체결로

대결과 분단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로 가자!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



한반도 평화협정 이것만은 알자!

글쓴이 고영대

현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이자,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사드 제대로 알기, 사드 배치 거짓과 진실』을 출간했고, 공저로는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1, 2권과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있다. 작전통제권,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 많은 글을 발표했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 행사에서 MD 관련 글을 다수 발표했다.



1. 평화협정이란?

- 한반도는 64년째 '정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장기적이고 비정상적인 대결 체제입니다. 연평도 포격전, 개성공단 폐쇄, 과도한 국방비, 청년 군복무 문제, 한미동맹, 한·일 '위안부'야합,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이 모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1953년 7월 27일, 북·중·미를 당사자로 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전쟁이 중지되었지만, 이 정전협정이 한반도 평화의 완전한 회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남북 당국은 '남북 기본 합의서'(1992년)에서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5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고, 회복된 평화 상태를 가장 공고하게 보장해 주는 방안이 바로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이야말로 전쟁을 정치적,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종결짓고 평화 상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가장 확실한 분쟁 종식 장치입니다.

- 이에 남북 당국도 평화협정을 “전쟁을 종결짓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교전 당사국 간에 체결되는 협정”(통일원,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 관련 자료집』, 1994. 12), “국가들 사이에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맺는 협정”(북한, 『조선어사전』, 1989)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민족적 노력

- 정전협정(1953. 7. 27) 4조 60항은 “... 3개월 내에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외국군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1954. 4. 26~6. 15)이 19개 관련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하지만 남북 총선거 방식과 외국군 철수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남·북·미·중, 1997. 3~1999. 8)이 열렸으나,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대립한 끝에 결렬되었습니다.

- 2000년 10월, 북한과 미국은 ‘공동 코뮈니케’ 를 발표하여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최초의 북·미 합의입니다.
- 2005년, 6자회담(남·북·미·중·러·일)에서 채택된 ‘9·19 공동 성명’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가질 것”에 합의했습니다.
- 2007년, 남북이 채택한 ‘10·4 선언’은 4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최초의 남북 합의입니다.



3.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 주장이랑데?

-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물론 제네바 정치회담이 무산된 이래 냉전시대 하에서는 북한이 주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와해된 후에는 남한과 미국도 한반도 평화협정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 노태우 정권은 2~3차례에 걸쳐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통일원,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 관련 자료집」).
- 김영삼 정권은 1996년 4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제안하고, 회담 개최를 성사시켰습니다.
- 노무현 정권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창했으며, 이를 '10·4 선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 2007년, 당시 한나라당도 신대북정책으로 '평화협정 체결'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부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북핵 폐기를 전제로 “평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조선일보, 2007. 9. 7).
- 오바마 정권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연합뉴스, 2016. 4. 12).
- 중국 당국은 2016년 2월 이래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 이렇듯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결코 북한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한·미와 중국 당국의 주장이자,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수구 정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4. 평화협정 당사자는? 남·북, 남·북·미, 남·북·미·중, 북·미?

-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남한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어서 평화협정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한국전쟁 교전 당사자이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평화협정 당사자로 되어야 합니다.
- 남한이 평화협정 당사자로 되지 않는다면 남한과 한국군이 평화협정 이행 의무를 지지 않게 됨으로써 평화협정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남한은 1954년에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에도 당사자로 참여했습니다.
- 미국은 정전협정 당사자이며 남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어 평화협정 당사자로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평화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면 미국과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이행 의무를 지지 않게 됨으로써 평화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평화협정 당사국으로 될 수 있으나,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지 않고 평화협정 이행에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평화협정 당사자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렇듯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남한과 북한은 '10·4 선언' 4항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을 당사자로 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한편 북한과 미국을 당사자로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남한을 당사자에서 배제했을 경우 평화협정 이행 과정에서 남한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5.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 줄 한반도 평화협정

- 한반도 분단은 일제의 식민 지배와 미국과 소련 등 외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 대결과 분쟁은 외세의 개입을 불러오고 분단을 영구화합니다. 남북 분단 및 대결과 외세 개입이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 이에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켜야 남북 대결과 분쟁을 막고 외세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남과 북은 '7·4 남북 공동성명'(1972)과 '남북 기본 합의서'(1992)에서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민족의 단결로 대결과 분쟁을 지양하고 평화를 구현함으로써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통일의 3대 원칙에 따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남한과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할까요?

- 남한과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북한도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나 전략자산을 전진 배치한 조건에서는 미국·남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북한 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이래 핵전력을 계속 증강해 오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몽상에 불과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정부 대변인 성명(2016. 7. 6)에서 핵을 보유하게 된 이유를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실제로 북한은 이 성명에서 “남한에 있는 핵무기 공개, 검증, 한반도와 그 주변에 핵 타격 수단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담보, 핵 위협 중단과 핵 불사용 약속, 미군 철수 선포”를 한반도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런 조건들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항, 4항)이나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 (3조 1항), ‘9·19 공동성명’(1항) 등에서 이미 보장된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충족 가능한 조건들입니다. ‘미군 철수 선포’는 이전의 ‘주한미군 철수’에 비해 한 걸 완화된 주장입니다.
- 이렇듯 한반도 비핵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에 평화협정 체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7. 사드 한국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미칠 영향은?

-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의도는 한미일 통합 미사일 방어망(MD)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야합(2015. 12. 28)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2016. 11. 23)도 한미일 통합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 일본과 동맹을 맺게 되면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군사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이 전쟁 수행 능력과 군사력, 군사기술에서 한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유사시 한·미·일 집단방위를 명분으로 한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도 커집니다.
- 특히 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어 한·미·일 동맹이 구축되면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냉전 대결 구도가 형성됩니다.
- 그 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과 분쟁이 만성화됨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넘기 어려운 난관이 조성됩니다.



- 이렇듯 사드 배치는 결코 무기 체계 하나를 도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식민 지배로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남한이 군사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을 열어 주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거대한 장애물을 쌓게 됩니다.
- 이와 달리 남북, 북미대화나 6자회담이 개최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 구도가 완화되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사드 배치의 명분이 힘을 잃게 되고, 배치된 사드도 철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있나?

- 한반도는 남북 사이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총알보다 3~5배나 빨라 불과 2~5분이면 남한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시간이 없습니다.
-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전을 하며 낙하하기 때문에 사드로 이를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탄도미사일(노동미사일 포함)이 미사일 몸체를 파괴한 파편이나 가짜 탄두와 함께 날아오면, 사드가 진짜 탄두를 구별할 수 없어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 북한이 동시에 대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이에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수도권 이남은 사드로 방어한다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요행수를 바라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는 미국·러시아 등 핵 보유국들이

- 핵군축 의무의 성실한 준수 (핵확산금지조약 6조)
- 핵 선제 사용(First Use) 교리와 핵우산 폐기
-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무기 불사용 약속(NSA)
- 핵무기 금지조약 체결 등

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국 핵탄두 보유 수

미국 : 7,000 (전술핵 : 500)	러시아 : 7,290 (전술핵 : 2,000)
중국 : 260	북한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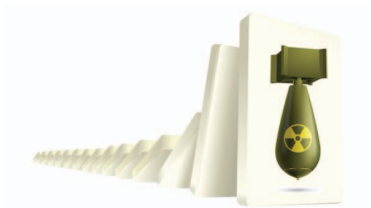
* 출처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16)

* 일본 30,000기 이상 핵무기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 보유

8. 북핵을 막기 위해 미국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남한도 핵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트럼프 대통령, 2017. 3. 4),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겠다”(홍준표 전 대선 후보, 2017. 4. 23),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2017. 3. 5)라는 등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남한이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 핵무기의 재배치나 남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핵대결을 격화시키게 됩니다. 나아가 남한의 핵보유는 일본과 대만의 핵보유로 이어져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를 능가하는 핵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 따라서 미국 핵무기의 재배치나 남한 핵개발은 북한의 핵전력 강화를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를 냉전시대에 능가하는 핵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 미국은 남한에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를 제공해 왔지만 한반도 평화를 담보해 주지 못했으며, 도리어 북한 핵개발의 원인이 되어 한반도 핵대결만 불러왔습니다.
- “핵으로만 핵을 막을 수 있다”는 핵억제론은 이미 실패한 이론으로, 핵무기가 분쟁을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핵무장이 아니라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에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 길 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

- 전술핵과 전략핵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며,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군은 폭발력 기준으로 20KT 이하(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의 핵무기를 전술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0KT 이하를 전술핵으로, 그 이상을 전략핵으로 분류합니다.
-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미국의 핵폭탄은 10~16KT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10개 안팎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술핵도 국가 전략시설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사용하면 전략핵으로, 전략핵도 일선 군대를 상대로 사용하면 전술핵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 1KT(킬로톤) : TNT 1,000톤의 폭발력과 같음,

핵우산과 확장억제란?



- 핵우산은 “핵무기 보유국이 자신의 핵억제력으로써 제3국의 위협, 공격으로부터 핵무기를 미보유한 동맹국, 우방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 작전 군사용어사전』).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1978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핵우산,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통해 억제한다는 개념으로, 선제공격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우산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공세적인 개념입니다.
- 미국의 남한에 대한 확장억제는 북한의 1차 핵실험(2006. 10) 직후부터 적용되었으며, 2009년부터 구성 요소를 세 가지—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로 구체화했습니다.

9. 한반도 핵문제의 시원과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과 해결책은?

- 미국은 1957년 최초로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13항 2목) 위반입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는 최대 1,000여 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 기도를 저지한 대가로 1978년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했습니다.
- 1991년,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남한에서 철수시켰지만 대북 핵 선제공격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던 오바마 정권도 「핵 태세 검토 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2010)에서 미국이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 이렇듯 한반도 핵문제의 시원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남한 배치에 있습니다.

- 북한의 핵개발은 핵 선제공격 전략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한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미국 ‘대서양위원회 Atlantic Council’, 2007. 4)이라는 것이 미국 관료 사회와 민간 연구기관들의 대체로 일치된 견해입니다.
-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원인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아닌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가시게 해주는 것, 곧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 있습니다.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현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북핵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10. 한반도 평화협정을 잉태했던 6자회담이 좌초된 이유는?

- '9·19 공동성명'(2005)은 한반도의 비핵화(1항)와 항구적인 평화체제(4항) 구축에 합의했으며, 그 이행을 위한 1·2단계 조치인 '2·13 합의'(2007)와 '10·3 합의'(2007)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6월, 북한은 과거 핵 활동을 담은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중국)에 제출하고, 2단계 조치의 완결(북핵 시설의 불능화)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를 단행했습니다.
- 이후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2008. 7. 10~12)는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체제 수립”과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지도 원칙” 논의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수석대표회의(2008. 12. 10~12)는 비핵화 검증 방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 미국은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핵 프로그램도 사찰할 수 있도록 북한 어느 곳이라도 기습 방문,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북한은 이를 주권 침해라며 맞섰습니다.



- 또한 미국은 북한의 군사기지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규정을 훨씬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IAEA의 사찰은 “신고된 시설의 약정된 장소에만 접근하고 당사국이 동의한 범위에서만 실시”(국방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2007)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미국의 무리한 사찰 요구는 이라크 침공(2003)의 구실로 된 미국의 이라크 사찰을 연상시켰습니다.
- 이로써 6자회담은 좌초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냉전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잉태했던 민족적 기회는 다시 긴 동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1. 평화협정 체결이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인 이유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의 당위성과 현실 가능성

- 북한은 정부 대변인 성명(2016. 7. 6)에서 핵을 보유하게 된 이유를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곧 평화협정 체결에 있습니다.
- 그러나 북한은 ‘선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은 ‘선 핵폐기’를 요구하며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협상 과정에서 누적된 상호 불신의 산물입니다.
- 이러한 대결 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병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에 북·미는 9·19 공동성명 5항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병행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행 과정입니다.

- 중국도 9·19 공동성명에 의거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병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간 단계로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북핵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 트럼프 정권도 최근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북·미 간 대화 재개 조건에 접점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동결-폐기' 입장이 북핵 동결-한미 연합연습 중단,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병행 추진으로 발전된다면 다시 한 번 남북, 북미 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 구상' (2017. 7. 6)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평화 구상' 발표를 통해 북에 5대 정책 방향과 4대 실천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 5대 정책 방향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남북 합의 법제화와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작성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 등입니다.
- 4대 실천 과제는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7·27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 정상 만남 등 남북 대화 재개 등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 구상'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2000. 3. 9)보다 한층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를린 선언'은 △경제적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 △남북 대화와 특사 파견 등을 담고 있습니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 구상'은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의해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에 호응해 나선다면, 물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어떻게 다르나?

- 한국 외교부는 비핵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를 “특정 지역 내에서 국가 간 조약에 의해 핵무기의 생산·보유·배치·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NPT 상의 5개 핵보유국들이 비핵지대 조약 당사국에게 핵무기 사용 및 위협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하는 핵군축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 기존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치적 선언 형식으로 발표된다(예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이 경우 5개 핵보유국에 의한 NSA 부여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국내 시민단체들은 비핵지대와 비핵화 개념은 동일하다고 설명합니다. 유엔과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등 국제사회에서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구분하는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보장하고 핵무장 함정

과 항공기 등의 한반도 영해·영공의 통과와 기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속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NSA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에서 핵무장 함정과 항공기의 영공·영해 통과를 막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A나 핵무기의 영공·영해 통과를 막는 보다 엄격한 개념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일본의 비핵지대화를 포함한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함께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에 맞는 방안입니다.
- 북한의 '조선반도에서의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 데 대한 제안'(1986)은 핵기지 불용과 핵무장 항공기의 영토·영해·영공 통과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느슨한 개념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 뉴질랜드도 1984년부터 핵무기 반입이나 핵추진·핵무장 함정의 영해 진입과 기항을 금지해 왔으며, 1987년에는 비핵지대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핵무장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는 등의 미국의 공세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12. 평화협정 체결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안보가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 정전협정 60항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등의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중국군 철수를 전후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담보하는 전제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양국군이 한국전쟁의 주된 교전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양국군 철수가 전후 한반도 평화 회복의 관건으로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 중국군은 1958년까지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1953. 10. 1)해 지금까지 주둔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평화협정에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와 방안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 평화협정 체결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더라도 남한 안보가 위태로워지지 않습니다. 남한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전력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해 해체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후 남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전력이 될 수 없습니다.
- 더욱이 평화협정은 북·미 불가침조약 등 적대 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체결되므로 평화협정 체결로 북·미, 남·북 간 군사적 대결 구도가 해체됩니다. 북·미, 남·북 간 분쟁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다는 뜻이죠.
-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북한군과 대결을 지속할 때 지금처럼 끊임없이 전쟁위기가 찾아와 오히려 안보가 위태로워집니다.



13.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할까요?

- 한반도에 항구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협정과 평시·유사시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모순입니다.
- 한미동맹은 외부(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국제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국 방어를 미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남한 방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 북한과 중국 사이에도 상호원조조약(1961)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과 미국은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국교를 수립하는 등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남과 북도 공존 공영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 무엇보다도 평화협정에는 전쟁 재발 방지책을 담게 됩니다. 불가침조약, 외국군 철수,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남북 간 재래식 군축, 외국군과의 군사훈련 금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경계선 확정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과 북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동맹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남북은 외국의 군사적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시에도 동맹에 따른 전쟁 준비와 연습으로 대결과 긴장이 조성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한 의미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 해체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 동맹만이 안보를 위한 유일한 선택지일까요?

- 남한은 세계 10위의 군사대국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동맹을 유지하게 되면 평시에도 공동의 적을 상정하고 전쟁 준비와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결과 분쟁을 야기해 도리어 안보를 위태롭게 합니다.
- 나아가 동맹은 선제공격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동맹에 의한 선제공격은 전쟁을 불법화하고 있는 유엔헌장 등 국제법에 위배됩니다.
- 또한 동맹은 그 유지를 위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한국은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연간 약 2조 원의 무기 도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6조 원에 이르는 미군기지 이전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치유비, 부지 제공 등 막대한 직·간접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의 주권 침해 등 무형의 비용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 이렇듯 동맹은 평화롭고 호혜 평등한 국제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뿐입니다.
- 동맹의 대안으로 집단안보가 있습니다. 유엔은 집단안보의 대표체로서, 나토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동맹으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지만 국가 간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불법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나라를 무력 응징하는 징벌을 가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 냉전시대 유럽에서는 미·소 주도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결성해 신뢰 구축과 군축 등에서 성과를 거뒀으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발전시켰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가 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집단안보를 발전시키면 동맹을 대체할 안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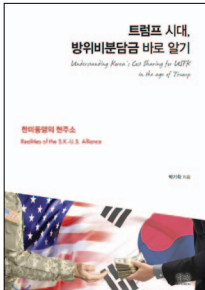


15. 평화협정 체결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데 굳이 시민들이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등 3개 또는 4개 나라입니다. 이 중에서 남한과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반면, 북한과 중국은 적극적입니다. 평화협정 체결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도 해체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과 개입 명분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과 남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관련 당사국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무한정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당사국들 간 이해를 절충한 나머지 애초의 취지가 왜곡되어 평화협정이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 핵과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이 온존하고 재래식 군축이 배제되는 등 평화협정의 핵심 내용이 무디어지거나 먼 훗날의 과제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 이에 평화협정 체결 시기를 앞당기고 철저한 전쟁 재발 방지책을 담보하는 명실상부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하려면,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이 확립되어 평화협정이 통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평화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정부 당국을 감시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결코 당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출간일 2017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216쪽 | 310g
 크기 148*209*20mm
 가격 16,000원

박기학 저 | 한울아카데미



출간일 2017년 4월 30일
 쪽수, 무게 260쪽 | 400g
 크기 153*224*20mm
 가격 15,000원

고영대 저 | 나무와 숲



출간일 2010년 7월 27일
 쪽수, 무게 182쪽 | 356g
 크기 148*210*20mm
 가격 10,000원

평화통일연구소 | 한울아카데미



이 소책자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제작해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994년에 창립되어 20년 넘게 활동해 오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회원 회비로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소책자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책자 신청 및 문의 02-711-7292

후원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홈페이지 www.peaceone.org